

“의료계 집단행동,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어렵다”

尹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의료계에 최후통첩, 엄정대응 풀이
“1학기 2700곳서 늘봄학교 운영 학교, 국가돌봄 중심역할 해줘야 지역마다 정책품질 차이나면 곤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불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에 29일까지 복귀시한을 최후통첩한 가운데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이어갈 경우,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안건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해 “고령화와 첨단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복지와도 직결돼 있다.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개혁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앞세워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 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다. 이런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도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발언 후 조규홍 복지부장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의 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래 이번 1학기에는 2000여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해 총 2700여 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학교가 국가돌봄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준비상황을 점검해 보니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수의 차이가 크고, 준비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며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 논리나 이해득실도 다 떠나서 아이들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1면 ‘국내기업 역차별 우려’서 계속

미국 상공회의소 “유사규제 논의 주시 규제안에 ‘큰 결함’ 韓, 투명성 보여야”

해외 플랫폼 기업에는 법안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매출, 이용자 수, 점유율 등의 세부내용을 국내에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매출은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로서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가 너무 늦게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가 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공정위의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어 해외 플랫폼은 감시망을 벗어날 우려가 있다. 공정위가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를 불식시킬 명확한 해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반발수위가 높아지자 공정위는 지난 7일 “플랫폼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해 나가겠다.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할 것”이라며 “법안 공개 시기는 특정할 수는 없다”며 한발 물러났다.

일각에선 마땅한 대안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전 지정 제도가 빠지면 이 법의 의미가 크게 반감된다. 다른 대안도 별로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 “韓 정부, 양국간 경제관계 부담 키운다” 비판

미국에서도 한국 정부의 해당 규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의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 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며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조치에 필요한 투명성과 열린 대화의 유형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미국 언론은 한국 정부가 양국간 경제 관계에 부담을 키운다며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즈(NYT)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플랫폼법은 한미 양국간의 경제 관계에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인터넷 업계에 공포의 물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에 인터넷 업계에 공포의 물결을 일으켰다”며 “유럽 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법을 제정해 주요 기술 기업의 영향력을 억제할 것”이란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원전수출보증 사각지대 해소… 한도 최대 3배 늘린다

산업부-한국무역보험공사
1250억 보증보험 프로그램 신설
200만 弗 이하 심사절차 간소화

정부가 원전 수출에 특화된 보증보험 프로그램을 신설해 원전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8일 총 1250억원 규모의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1조원 규모 원전 특별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신규 프로그램은 해외 수주에 성공하고도 여신한도 부족으로 인해 수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해결하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

/자료=산업부

구분	무보 수출보증보험	원전수출보증
지원한도	· 1배	· 최대 3배 - 특례인수위원회* 심사를 통해 특별한도 부여 (최대 3배, 1,500만불 이내) - 한수원 유자격자, 원전수출첫걸음 기업은 특례위심사 없이 1.5배 지원(1,000만불 이내)
심사절차	· 모든 발급신청 건에 대해 기업신용평가, 한도심사 진행	· 2백만불 이하 건은 한도심사 생략 * 단, 신용도 최하수준(G급) 제외, 자기자본 이내
보험료	· 중소 25%, 중견 15% 할인	· 중소 40%, 중견 32% 할인

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원 규모는 1250억원으로 1사당 1500만달러 이내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증 한도가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확대되고, 200만달러 이하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료도 20% 추가 할인해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원전·금융분야 전문가로 특례인수

위원회를 구성, 부보율 제한(90% 이내), 기업별 총한도 설정(최대 1500만달러) 등 위험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작년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당초 2027년 목표인 원전설비 5조원 수출을 2024년까지 조기달성하고 2027년까지 수출 10조원 달성, 수출 중소·중견기업 100개사 육성을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테슬라 모델Y 보조금 받게 내리고, 1.9억 벤츠 4000만원 인하

>> 1면 ‘보조금 개편에 국내외’서 계속

테슬라는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Y의 가격을 200만원 내린 5499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인

5500만원 미만에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출고가 1억9000만원인 ‘EQS 450 4MATIC’을 출고가 할인 등 4000만원 가량 가격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성비 모델 출시에도 속도를 높이

고 있다. 기아는 올해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한 중소형 전동화 SUV EV3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기아는 광명2공장에서 EV3의 생산을 위한 시험 가동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경형 SUV

캐스퍼의 전기 버전인 캐스퍼 EV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올해 이퀴녹스EV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퀴녹스EV는 GM의 얼티엄 플랫폼이 적용된 중형 전기차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